

광주·전남 초등교사 명퇴 급증... 교권 추락 여파?

광주 2년새 2배 이상 급증 추세 전남도 3년 연속 100명대 유지 각 교육청 “공백 최소화 대응 중”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 초등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교권 추락과 과중한 행정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중등교사의 명퇴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 상반기 지표는 보이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명예퇴직 인원은 2022년 29명에서 2023

년 50명, 2024년에는 64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33명이 명퇴를 신청한 상태다.

전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남 초등교사 명퇴 인원은 2022년 104명, 2023년 120명, 2024년 역시 120명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76명이 교단을 떠났다.

많은 이들이 교단을 떠남에 따라 명퇴 교원에게 지급되는 예산도 큰 폭으로 늘 수밖에 없다. 실제로 광주는 지난 2022년 30억원이던 명예퇴직 관련 예산이 2024년에는 67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96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늘었다.

중등교사 명퇴 수는 정체 상태다.

광주의 중등 명퇴자는 2022년 53명, 2023년 54명, 2024년 55명으로 매년 1명씩 늘었을 뿐이다. 전남의 경우 2022년 273명에서 2023년 281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에 234명으로 크게 줄었다.

교육계는 초등 명퇴 급증의 배경으로 ‘학교 현장의 피로 누적’과 ‘교권 약화’를 지목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 사이에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됐고, 교사 보호 요구가 전국적으로 커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광주지역 초등교사 A씨는 “교직의 어려움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엔 학부모

민원과 갈등이 더 커졌다”며 “행정업무까지 더해져 감정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는 지난해 2학기부터 초등교사들이 학생의 휴대폰을 일시 보관했다가 ‘불법행위’로 고발당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이어졌고, 일부 교사는 민원 대응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PTSD)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은 증가하는 명퇴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및 신규 교원을 신속히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요인은 다양

하고 개인적 배경도 있으나,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 시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심리치료 상담 확대 등을 통해 교사들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도 준비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초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사단체들은 “단기 인력 충원만으로는 교직 매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과 교권보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병하기자

동구, 노후 간판 32개소 철거... 안전점검도 실시

“도시미관 개선·안전사고 예방”

광주광역시 동구가 노후 간판 32개소를 철거하고 안전 점검도 계획하는 등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동구는 장마철을 대비해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 지난 10일 총 32개소의 노후 간판을 철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폐업 또는 이전으로 방치됐거나, 파손이 심해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

사와 건물주 신청, 자체 조사를 통해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했으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완료했다.

특히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주와 상가 관리자에게 자진 정비를 독려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

동구는 이달 중으로 추가로 위험 간판 16개소에 대해 광주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중심 상권과 통행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이며, 위험 수준에 따라 즉시 시정, 안전장치 보강, 정밀진단,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영철 기자

광주 북구, ‘마약’ 관련 단어 간판·메뉴판 교체 지원

9월 최대 250만 비용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가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마약’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간판 및 메뉴판 변경 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당의 상호 및 메뉴명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개선해 건강한 식사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식당가에서는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등 마약을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단어가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를 제정해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시 업주가 마약 관련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 마약 관련 용어가 포함된 간판 및 메뉴판을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업소에 최대 250만원(간판 200만원, 메뉴판 50만원)까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관련 용어를 사용 중인 식당에서 간판 및 메뉴판을 먼저 교체한 후 구청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교체 비용이 지원금보다 큰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한다.

정승우 기자

소방·구급 등 긴급차 양보운전... 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긴급 자동차’의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통행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범죄자 수송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차량이다.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서 일시로 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이 도로 유형별로 달라 운전자가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긴급차가 교차로에 진입 시 정차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 신호를 강제 제어하는 시스템(우선신호시스템)에도 지역별 편차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긴급차와 양보 방법 등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등 개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정준 기자



사랑의 빵 만들기

광주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적십자 자원봉사단원들이 16일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에서 열린 ‘사랑의 제빵 나눔’ 행사에서 관내 경로당 9개소에 전달할 빵을 만들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해야”

정창수 남구의원 본회의서 발언 “1시간 무료주차 짧아 효과 없어”

정창수 광주광역시 남구 의원이 1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이용시간 확대 운영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은 각각 2023년 10월, 2025년 1월부터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유료로 전환되어 모든 이용객에게 1시간의 무료 주차 시간을 제공하고, 이후 10분 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 의원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나 차를 마실 여유를 즐기기에 1시간이라는 무료주차 시간이 너무 짧고, 주차시간을 의식해 서두르거나 아예 방문을 꺼리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고객 불편은 시장 상인들의 하루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에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4시간의 무료주차 시간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은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구 예산으로 조성되고 직영 운영

중인 시설인 만큼, 행정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키는 데 무게를 뉘어할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논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정책 기조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회복에 두고 있기에 지방정책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구 경제가 소상공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탱되어 온 만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이해와 뒷받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정준 기자

광산구, 21개 동 찾는 ‘일자리 대화마당’ 운영

주민과 자유롭게 소통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를 토대로 추진하는 2단계 사회적대화의 성공 기반을 다지기 위해 21개 동을 찾아가는 ‘지속가능 일자리 대화마당’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화마당은 민선 8기 광산구의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 추진 상황과 1단계 시민참여형 사회적대화의 결정체인 녹서에 담긴 핵심 질문을 주민과 공유하고, ‘좋은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지난 10일 신가동을 시작으로 7월10일까지 21개 동을 순회하며 대화마당을 이어간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직접 참여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 추진 배경 및 취지, 전담 부서 신설, 시민참여형 사회적대화 운영, 녹서 발간 등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좋은 일자리, 좋지 않은 일자리 기준, 수많은 정책에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주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 구정장은 “사회적대화와 합의야말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실현하는 해법”임을 강조하며, 7월부터 본격화하는 백서 제작을 위한 2단계 사회적대화에 대

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2단계 사회적대화는 광산구가 올해 신설한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지난 5월 출범한 사회적대화 전담 기구인 ‘지속가능일자리회’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광산구는 20개 핵심 질문에 대해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답을 찾고, 정책을 모색하는 사회적대화로 올해 안에 일자리 핵심 방안을 담은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백서가 만들어지면 실행계획서인 청서를 제작, 2026년에는 지속가능일자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상철 기자